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학교 동아리에서 명칭 변경을 둘러싼 회원들 간 대립을 자율적인 토론으로 해결한 것도 정치로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정부의 정책 집행, 입법부의 법률 제정과 같이 국가 차원의 권력 행위만을 정치로 볼 수 있어요.

- 1. 갑의 관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2. 을의 관점은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3.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시민 단체의 환경 운동을 정치로 본다.
4.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5.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가 작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 A는 법 그 자체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반면, 법률의 정당성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정의에도 합치되는 법률에 따라 국가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1. A에 따르면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B는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A와 달리 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본다.
4.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 A와 B 모두 행정 작용과 사법 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3.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므로 국가 내적 권리이다. 주권적 의사 표시로서, 대표를 선출하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A는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A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 1.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2.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3.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4. 기본권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5. 헌법에 열거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이다.

4.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임.)

△△ 신문 ○○○년 ○○월 ○○일
갑국의 총선 결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이에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권한이 없는 갑국 행정부는 행정부 수반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을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핵심 공약이었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이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던 가운데 □□부 장관도 법률안 가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을국의 국민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로 선출한다.
3. 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 수반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는다.
4. 을국과 달리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5.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 수반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헌법 재판소는 갑이 항소심 계속 중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을은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 절차에서 을은 ○○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경우'를 형사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 보상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은 을에게는 □□조항이 아닌 형사 보상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 기>
ㄱ.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 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하였다.
ㄴ. 을은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ㄷ.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형사 보상법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생존과 안정을 배려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청하는 원리이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정의로운 경제 질서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조치들을 통해 A가 구현된다.

- ①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국회**
- ② 복수 정당제 기반의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사법, 국회**
- ③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 **문화**
- ④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국회**
- 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국회**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현행 헌법에서는 A에 대한 B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A의 비상 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 명령권을 A에게 부여하면서 B가 A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C에 대한 해임 의결권이 해임 건의권으로 변경되어 B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 사법과 관련된 큰 변화는 D가 최초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E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존치시킨 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권을 D에 부여하여 위헌 심사권을 이원화하였다.

- ① B는 국무 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 재청권을 가진다. **국회**
- ② C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 ③ E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D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
- ④ A는 D의 장(長), E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
- ⑤ D는 E의 장(長), A, C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8.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고용 센터 x

상담 신청

질문 저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시즌을 맞아 물품 판매를 위해 남학생 3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갑(14세)은 중학생이고, 을(16세)과 병(18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 을, 병과 각각 체결한 근로 계약의 공통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024년 7월 20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2. 소정 근로 시간(휴게 시간): 13:00~20:00(16:00~17:00)
3. 근무일(주휴일): 수~일요일(월, 화요일)
4. 임금: 법정 최저 임금(시간급) 0 **6/1** **주휴**

답변

(가)

- ① 갑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X**
- ② 을을 근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X**
- ③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을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X**
- ④ 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X**
- ⑤ 병과 합의하여 병이 매 근무일 22시까지 2시간 더 근무하게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O**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주민 참여 제도 (가), (나), (다)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온 것을 발표해 볼까요?

(가)의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도의회 지역구 의원 A가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나)의 사례로는 ○○군수가 □□시절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다)의 사례로는 ○○군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군의회에 주차 시설 관리에 대한 '△△ 조례안' 제정을 청구한 것을 들 수 있어요.

<보 기>

- ㄱ. (가)의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기성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 ㄴ. (나)는 ○○군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 ㄷ. (다)를 통해 주민은 지방 자치법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 ㄹ. (가)와 (나) 모두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체제 비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체는 t 시기와 t+1 시기에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각 시기별 후보자는 A, B, C, D로 동일하고 D가 가장 연장자이며 후보자의 연령은 D-C-B-A 순이다. ○○ 단체의 각 시기별 유권자는 100명(V1~V100)으로 변함이 없으며, 유권자는 집단별로 동일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

<자료 1>은 각 시기 유권자 집단별 투표 결과이고, <자료 2>는 각 시기별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

유권자 집단	<t 시기>				<t+1 시기>			
	A	B	C	D	A	B	C	D
V1~V20	○				○			
V21~V40		○				○		
V41~V50			○					○
V51~V80				○				○
V81~V100								○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 t+1 시기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 집단은 결선 투표에서도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함.

<자료 2>

t 시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t+1 시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더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됨. 단, 결선 투표에서 2인의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① t 시기 선거에서 B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5%**
- ② t+1 시기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C가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0~70%**
- ③ t 시기와 t+1 시기의 당선인이 동일하지 않다면, t+1 시기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의 득표수는 최소 70표일 것이다. **60표**
- ④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선거 비용 감소에 유리하다. **X**
- ⑤ t+1 시기 대표 결정 방식에 비해 t 시기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X**

11.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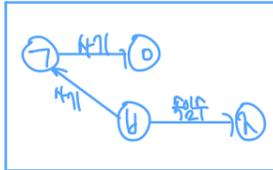
갑이 자기 소유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때문에 오염된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이를 모르고 산 을이 토지를 정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갑이 토지에 오염 물질을 누출하고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한 채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갑은 A에 따라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갑은 토양 오염 물질을 생산·저장·취급하여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어도 B에 따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① A에 따르면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가 인정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X
- ② A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O
- ③ B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X
- ④ B는 개인의 소유권 행사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X
- ⑤ A와 B 모두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X

#관계도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갑이 소유한 ○○ 승마장 및 그곳의 말 전부를 을이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의 말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을은 병과 승마 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을의 직원으로 승마 체험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병에게 승마 체험 중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안전 수칙을 몰랐던 병은 을이 진행하는 승마 체험 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흥분한 말의 뒷발굽에 치여 큰 부상을 입었다. 병의 친구 무는 승마 체험을 구경하던 중 ○○ 승마장 관람석의 보존·관리상 하자로 관람석 일부가 무너져 부상을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 ① 병은 병에게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진다. X
- ② 을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더라도, 을은 병에게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X
- ③ 을의 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갑은 무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O
- ④ 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이 병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더라도 을은 병에게 병의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X
- ⑤ 무가 치료비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더 이상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1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간 이익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A는 국가 간 상호 의존을 통해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전제하는 B는 개별 국가의 이익 추구 행위로 인한 국가 간 상호 불신 때문에 국제 사회의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에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X
- ② A는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O
- ③ B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X
- ④ B는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X
-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 선(善)이 존재한다고 본다. X

[14~15]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13세)은 △△ 스마트 워치를 사기 위해 법정 대리인의 ○○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기로 결심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 글을 본 을(23세)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갑과 ○○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위 매매 계약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갑은 번심하여 돈만 챙길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에 을이 5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 자전거를 건네주겠다고 을을 속였다. 갑에게 속은 을은 50만 원을 갑의 계좌에 송금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갑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갑은 을에게서 받은 돈으로 △△ 스마트 워치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병(17세)으로부터 스마트 워치를 구매하였는데, 알고 보니 병이 모조품을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었다. 또한 병은 갑에게서 받은 돈으로 정(35세)이 운영하는 전자 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헤드폰을 사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병이 성인이라고 믿은 정은 이 헤드폰을 병에게 판매하였다. 한편, 을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갑의 사기 혐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돈의 사용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병의 사기 및 위조 혐의를 확인하고 병에 대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 ②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O
- ③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 ④ 병의 법정 대리인은 정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 ⑤ 정은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매매 계약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

15.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갑의 연령을 고려하여 검사는 갑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X
 - ㄴ. 갑과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ㄷ. 검사가 병을 기소하여 병에 대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갑도 재판의 당사자가 된다. O
 - ㄹ. 병의 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의 부모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 X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A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의 공약인 ○○역 완공이 다시 연기됨에 따라 ○○역 주변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사업도 미루어졌다. 이에 ○○지역 상인들의 개발 이익을 위해 모인 B는 해당 사업의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익 추구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C는 ○○지역에서 총선용 개발 공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① A는 국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는 국정 감사권을 가진다. X
- ② B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O
- ③ C는 정치 과정에서 선출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 기구이다. X
- ④ C와 달리 B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X
- ⑤ A와 B 모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X

17.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A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발표해 봅시다.

갑: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를 사제로 들 수 있습니다. **위법성(3) (단체 내외에 사제 배외)**

을: 친구의 새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그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손괴한 행위를 사제로 들 수 있습니다. **구형면(3)**

병: 아버지가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1) (법적 비난 가능성)**

교사: 병이 적절한 사례를 발표했어요. 갑은 B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을은 C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했어요.

- ① A는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 X
- ② B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X
- ③ C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의 유형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O
- ④ A와 C 모두 행위자가 아닌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한다. X
- ⑤ C가 인정되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B가 인정된다. X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사귀고 있던 동갑내기 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의심하여 을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교제 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한편 병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철에서 흥기를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병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검사는 구속된 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병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병이 항소하였고, 구금된 상태에서 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 ① 갑에게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 동안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으면 갑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고의 효력 상실**
- ② 을은 갑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해사**
- ③ 병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사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청구로 병을 직접 심문한 후 병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였다. **부심판 해명**
- ④ 1심 법원은 병에게 교정 시설에 수용되거나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는 형을 선고하였다. **구속/금고**
- ⑤ 병은 항소심 계속 중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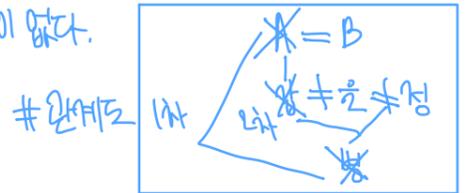
1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영화감독 갑

뉴스 카페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얼마 전 사망한 영화감독 갑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의 생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소설가 A의 친생자인 갑은 B의 도움으로 영화감독이 될 수 있었다. B는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 A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갑을 키우다 B와 법률혼을 하였다. 한편, 갑은 을과의 이혼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갑의 작품마다 출연했던 영화배우 을은 갑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갑의 자녀로는 병이 유일인데, 병은 을과 정희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을과 이혼하면서 병의 친권자로 결정된 갑은 병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과 이혼 후 연이은 작품 실패로 힘들어 하던 갑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A와 병의 사망 이후부터라고 전해진다. A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한 달 후 8세인 병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 지난해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갑은 사망 전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 ① A의 사망 당시 을과 병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O **이혼 당시들만 친양자로**
- ② 병의 사망으로 정희는 병의 상속인이 된다. X
- ③ 갑의 사망으로 B는 갑의 상속인이 된다. X **친생자만**
- ④ 갑과 을의 이혼이 확정된 때부터 병은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X **입양이 확정된**
- ⑤ 병의 사고 당시 을은 병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은은 친권이 없다.**



20.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약속은 제3자를 이롭게도 해롭게도 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말해 주듯이, A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분명한 동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을 구속할 수 없다.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A의 당사국이 제3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A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제3국이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제3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위 협약에 따르면, A의 규정이 법적 확신이 부여된 일반적 관행인 B로서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A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O
- ② 국제기구는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더라도 A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신약은 국제기구도 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B를 재판 준칙으로 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들만**
- ④ B는 A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法源)으로 법적 결정의 보조 수단이다. **없을 때도 있을 때도 가능(?)**
- ⑤ A의 규정이 B로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B로서 제3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X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